

|                                                                                                     |             |                |               |
|-----------------------------------------------------------------------------------------------------|-------------|----------------|---------------|
| <br><b>정치하는엄마들</b> | <b>보도자료</b> |                |               |
|                                                                                                     | 보도일시        | 2018. 5. 30. 수 |               |
|                                                                                                     | 담당          | 장하나            | 010-3693-3971 |
|                                                                                                     |             | 소송대리인 류하경 변호사  | 010-9109-8630 |
|                                                                                                     | 배포일시        | 2018. 5. 30. 수 | 총 4매 (별첨 5건)  |

## 비리 유치원 ·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국무조정실 및 인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일시 : 2018년 5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서초동 법원정문 삼거리)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장하나 활동가 (국무조정실 소송 원고 / 4세 아동 양육자)
  - 발언 2 : 류하경 변호사 (소송대리인 / 법률사무소 휴먼)
  - 발언 3 : 김신애 활동가 (인천교육청 소송 원고 / 5세 · 4세 아동 양육자)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당사자 정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7개 교육지원청에 ‘지난 3년간 실시한 정기감사·특별감사에 적발 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단 28개 교육지원청만 감사 적발 기관명을 공개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비공개 처분한 149개 교육지원청 중 유치원 ·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인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공개 답변을 한 교육지원청은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원청 중 22개 전부, 울산교육청 산하 2개 지원청 중 2개 전부, 세종시교육청, 부산교육청 산하 5개 지원청 중 1개소(북부), 경북교육청 산하 23개 지원청 중 2개소(영덕 · 예천) 이상 28개소이다.

□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국무조정실 · 교육부 · 복지부를 상대로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적발 된 기관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와 수사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특정감사는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대도시(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 등 9개 지역)를 중심으로 규모(원아수·예산)가 크거나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95곳(유치원 55, 어린이집 40)을 선정하여 이뤄졌으며, 그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 적발된 바 있다.

□ 유치원·어린이집의 감사 결과 적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적발 기관명은 비공개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사실상 양육 당사자들은 내 아이가 비리 기관에 다니는지 인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 재정이 비리 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 적발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송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행정당국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해당 감사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문제 기관에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감사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의 명칭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정보일 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를 비공개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한유총·한어총의 막강한 조직력은 선거철에 위력을 발휘하는데 감사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양육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비공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공개한 유치원·어린이집 특정 감사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지역(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을 중심으로 규모(원아수, 예산)가 크거나 여러 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95개소(유치원 55, 어린이집 40)를 선정하여 2016년 10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와 합동으로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곳 중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이 적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55개소 중 54개소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이 적발되었고, 어린이집 40개소 중 37개소에서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이 적발되었다. 무려 96%에 달하는 적발율은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보육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행정 당국의 무능과 의지박약을 반증하고 있다.

적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다. 비리 기관들은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기관장의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이용까지 기관 운영비를 개인 짬짬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교구·식재료 등 각종 물품 구입 및 시설공사 등 용역 계약

시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설립자(대표자)들은 다수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의 패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교구·교재·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 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립자나 원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실제 근무 여부 등의 증빙 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반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식품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정감사 적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실시한 유치원 감사 결과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177개 교육지원청 중 28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답변을 내놓았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감사 적발 기관명을 비공개하는 부조리한 관행 때문에 양육 당사자들은 내 아이가 비리 기관에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교육·복지 재정이 비리 기관 원장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이 단지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감사 적발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만 한다.

국무조정실 특정감사에서 온갖 부정부패와 위생불량이 드러난 것을 보고 대체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리 기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양육 당사자의 책임이자 의무다. 국무조정실은 비공개 처분을 내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거하여 감사와 수사에 관한 사항이자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국무조정실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주체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사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감사 적발 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다름없다. 감사와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사고와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는 그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권과 생명권은 유치원·어린이집 소유주의 영업권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그리고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의 명칭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정보일 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정보를 비공개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위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국무조정실은 감사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할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방법도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개인정보라

며 철저히 유치원·어린이집 사업자의 편에서 사고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 혼동하는 행정 당국의 안일함을 목도하며, 제2의 세월호 사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 과연 이게 소송썩이나 할 일인가? 수 백 억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대체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기자회견썩이나 해야 될 일인가? 부디 행정법원이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기대한다.

2018년 5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

- 붙임 : 1. 소장\_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 1부.  
2. 국무조정실\_비공개결정통지서. 1부.  
3. 국무조정실\_특정감사 보도자료. 1부.  
4. 국무조정실\_특정감사 개선방안. 1부.  
5. 국무조정실\_특정감사 위법사례. 1부. 끝.